

**윤석열 정부
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
향후 계획**

2024. 11. 14.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I. 필수·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	1
II. 연금개혁	5
III.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	7
IV. 약자복지	9
V. 바이오·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..	11

I

필수 ·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

1 추진경과

① 국정과제로서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지속 추진

- 의료개혁 4대 개혁과제 발표(2.1),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(2.6)
- 「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」 발표(2.2)
-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발족(4.25),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(8.30.)
- 2025학년도 의대 증원(25.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, 5.2)

② 비상진료대책 시행, 중증 ·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

- 2차례의 비상진료대책(2.19, 29), 3차례의 응급의료유지대책(8.7, 22, 28) 마련
- 당직·대체인력 지원, 중증진료 보상강화, 경증환자 분산 등을 위한 예비비, 건보재정 투입

2 주요성과

① 의료개혁 체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및 이행

☑ 의료개혁특위(4.25) 논의 통해 개혁 기틀 마련, 개혁 효과 체감을 위한 「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(8.30)」 발표, 핵심 과제 중심 연내 신속 이행

①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인력 수급추계특위 구성*

* 추천 접수 완료된 간호사 추계위부터 연내 출범, 의사 추계위는 의료계 참여 지속 요청

②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신속 이행(10.2.~)

< 상중 구조 전환 지원사업 진행 상황('24.11.) >

- ▶ (지정현황) 서울아산, 세브란스 등 31개 병원 지정 완료
 - * 수도권 16개소(국립대병원 1개소), 비수도권 15개소(국립대병원 6개소)
- ▶ (지원내용) '24~'27년 3년간 지원사업, 중증 수가 인상 등에 3년간 약 10조 원 지원
 - ▲중환자 입원 ▲일반입원 ▲중증 진료 ▲응급진료 ▲의뢰·회송 등 중증 진료 및 정책 가산, ▲구조 전환 성과에 따른 성과금 차등 지원
- ▶ (향후 계획) 중환자 진료 전환 상황, 전문 의뢰·회송 등 진료협력체계,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상중 구조 전환 지속 관리 및 성과 평가 실시

② 중증·소아·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

☑ 지역·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5년간 “10조원 + α” 규모로 보상 강화 추진

* ▲공급부족(중증응급 등) 5조원 이상, ▲수요부족(소아, 분만 등) 3조원 이상, ▲네트워크 협력분야 2조원 이상 등 총 10조원 규모 및 ▲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+α 투자

① ▲중증·응급, ▲소아·분만, ▲연계협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0조원 + α 중 1조 2천억원 既투자

< '24년 현재까지 既투자 내역 >

중증 응급 수가 인상	• 급성심근경색증, 심장혈관중재술, 이식수가, 마취료 등
소아 분만 수가 인상	• 신생아 중환자실, 1세 미만 입원료, 중증소아수술(281개), 6세 미만 심아진료 가산,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
연계협력 수가 인상	• 중증응급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, 소아진료 지역협력 등

② ▲상대가치 인상, ▲보완형 공공정책수가, ▲대안적 지불제도 등 실효성 있는 지불제도 마련으로 필수의료 보장 및 의료개혁 지원

< 필수의료 보장 강화, 공공정책수가 등 추진 현황 >

상대가치 인상	•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, 신생아실, 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('24.1.) •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('24.6.),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·고위험 수술의 보상 강화('24.7.)
보완형 공공정책수가	• 소아진료 정책수가('24.1.),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('24.5.),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('24.6.), 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 및 가산율 인상('24.7.)
대안적 지불제도	•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('24.1.) 및 보상금 선지급('24.10) •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('24.1.), 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착수('24.2.) 및 사전보상금 지급('24.5)

③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* 위한 중증 수술 900여개, 마취료 우선 인상(10월~)

* 인상 로드맵 ('24.下) 900개 → ('25.上) 누적 1천 개 → ('25.下~'27.) 누적 3천 개

☑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

① 과도한 외래 이용 제한 위한 ‘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*’ 시행('24.7~)

*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% 적용

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*을 통해 공정한 자격·부과제도 운영 및 보험료 부과 합리화**로 국민부담 완화

* ▲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, ▲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

** ▲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(5천→1억), 자동차 보험료 폐지(2월), ▲저소득층 '24년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, ▲2년 연속 건강보험료를 동결

③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

☑ 안정적 필수·지역의료 인력 기반 확보

- ① (의사) 의대정원 확대,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* 등 수련환경 개선, 필수의료 수련비용 지원(소아청소년과 月100만원, '24년 신규)
- ② (간호사)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*(2.27) 및 간호법 제정(8.28.), 교육 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 지원

* 165개 병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 16,408명 참여 중('24.9월 말 기준)

☑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 중추기관 육성

- ① (국립대병원) 국립대병원을 지역·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·연구·임상 투자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거점 역할 강화
- ② (지방의료원) 지역별 공공병원 경영 혁신 방안 마련 및 성과 보상 실시, 시설·장비 현대화*, 감염병 대응 및 기능 특성화 강화 등 추진

* 지방의료원 신·증축, 리모델링, 감염병 대응 및 분야별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·장비 확충 지원 등

☑ 적시 진료를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의료 강화

- ① (네트워크) 소아, 심뇌혈관,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기관 간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료 안전망 강화

* ‘(소아) 소아암거점병원(5개권역) 및 소아진료네트워크(20개) ‘(심뇌혈관) 중앙(1개소)-권역(14개소)-지역(25년 10개 예정)의 대응체계 구성 및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심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(기관간, 인적) 추진 ‘(중증외상) 전담전문의, 중환자실 간호사, 인프라 등 지원, 전문진료체계 구축

- ② (응급의료)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및 확대(6개소),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('24년 2개소 추가 지정, 총 44개소)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

-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('23년 10개소 → '24년 12개소) 및 달빛어린이병원('23년 60개소 → '24년 97개소) 확충 등 지역 소아의료 기반 강화
- 중증응급질환*에 대해 전국·지역 단위 병원 간 야간·휴일 순환당 직제 실시하여 24시간 365일 최종치료 제공('24.6~)

* 급성대동맥증후군, 소아(만 12세 이하) 급성 복부질환, 산과 응급질환, 기관지 출혈/이물질, 응급 혈관질환, 성인 복부질환

3 향후 계획

- (대책수립·이행)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 차질 없이 발표·이행
 - (2차 실행방안, 12월) 공감대 큰 多쟁점 구조개혁 로드맵 제시
 - 상종 구조 전환 후속으로 국민·의료계 공감 지역 2차 병원 육성, 일차의료 혁신, 협력체계(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) 구축 방안 제시
 - * ▲전달체계·지불제도 혁신 ▲비급여실손보험 개혁 ▲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대책 등 구조개혁 구체화
- (응급의료·비상진료, 12월) 겨울철 심뇌혈관·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대비 응급실 역량 강화 및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수립·홍보

II

연금개혁

1 주요 성과

① 5차 재정추계 실시('23.3)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('23.10)

- (위원회 운영) 3개 자문위원회* 운영('22.8~), 재정추계 실시 및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안 등 논의, 공청회 개최('23.9)

* 추계전문위('22.8~'23.5), 재정계산위('22.11~'23.10), 기금운용발전전문위('22.11~'23.8)

- (재정추계) 시산결과('23.1),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('23.3)

- 4차 추계('18)보다 기금소진 시점 2년 단축('57 → '55년)

- (의견수렴) 청년·사용자·특고직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(24회, '22.8~'23.8), 온라인 설문조사(2,025명, '23.7~8),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

- (종합운영계획)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 5대 분야(①노후소득보장 ②세대형평 ③재정안정 기금운용 개선 ④다층체계 정립), 15개 추진과제 제시

-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, 구조개혁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 개혁 방향성 제시,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* 포함

* 보험료율 3개(12, 15, 18%), 수급연령 2개(65, 68세), 기금수익률 3개(4.5, 5.0, 5.5%) 조합

② 국회 논의 참여·지원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('24.1~4월)

- (연금특위) 특위('22.7~'24.5) 및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운영('22.11~'23.11),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안 논의

- (공론화) 재정 전망 데이터 등 논의 기초자료 제공, 실무인력 파견을 통해 국회 공론화 적극 지원('24.1~4월)

< 공론조사 주요 결과 >

- ▶ (보험료율·소득대체율) ¹안13·50%는 56.0%, ²안12·40%는 42.6% 선택
- ▶ (가입상한 연령) 다수(80.4%)가 59세 → 64세 상향안 선택
- ▶ (기초연금) 수급범위 유지+급여 수준 상향 52.3% vs 45.7% 수급범위 축소+급여 차등
- ▶ (기타)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(92.1%), 기금수익 제고(91.6%) 90% 이상 찬성

⇒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연금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, 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여·야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

3 정부 개혁안 마련('24.9)

◆ 5차 종합운영계획, 공론화 논의 내용,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1년 만에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 제시

- (재정 재전망) 2023 장래인구추계('23.12.14, 통계청) 및 새로운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장기 재정전망 실시 ⇨ 개혁안에 반영

* 5차 추계 대비 기금소진 시점 1년 연장('55 → '56년)

- (개혁안 마련) 정부안 발표('24.9) ⇨ 논의 계기 마련 및 기준점 제시

① (지속가능성) 모수개혁(보험료율 9→13%, 소득대체율 40→42%), 기금수익률 1%p 제고(4.5→5.5%), 자동조정장치* 도입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

* 가입자 감소·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해 연금 인상액 조정(OECD 38개 중 24개국 운영)

② (세대 형평성) 청년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*, 지급보장 명문화로 제도 신뢰 제고

* ▲50대 年 +1%p ▲40대 +0.5%p ▲30대 +0.33%p ▲20대 +0.25%p씩 인상

③ (노후소득보장) 국민크레딧·보험료 지원 확대로 가입 기간 확보,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,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으로 빈곤 개선

-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, 개인연금 연금화 및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

- (홍보·소통) 세대별 간담회('23.12월~'24.8월, 8회), 노인가구 방문 인터뷰('24.7~8월, 총 12회), 온라인 설문조사(3천명 대상, '24.8월) 등 사전 의견수렴

- 정부 개혁안 발표 후, 장·차관 릴레이 브리핑(5회), 방송 인터뷰(24회) 등을 통해 개혁 필요성·시급성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

2 향후 계획

- (국회 논의 지원)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·지원
- (홍보 강화) 제도 및 개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국회·언론·청년 등 대상별 전방위적 홍보·소통 강화

Ⅲ

저출생 대응체계 강화

1

현황

- (현황) '23년 합계출산율 0.72명, 출생아 수 23만명 기록, '23년 4분기 최초로 0.6명대(0.65명) 합계출산율 기록

* (합계출산율, 명) ('15) 1.24 → ('17) 1.05 → ('19) 0.92 → ('21) 0.81 → ('23) 0.72

** (장래인구추계, 중위, '23) ('24) 0.68 → ('25) 0.65 → ('55) 1.08명 전망

2

주요 성과

- ◆ 올해 2분기 이후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→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예상('23. 0.72명)

* (출생) 7월 1,516명(7.9%), 8월 1,124명(5.9%)/ (혼인) 7월 4,658건(32.9%), 8월 2,717건(20%)

- (저출생 대책) 출산율 반등을 위해 3대 핵심 분야(일·가정양립, 양육·돌봄, 주거·결혼)를 선정한 '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' 발표(저고위, '24.6)

<3대 핵심분야 주요 내용>

- ▶ (일·가정양립) 단기육아휴직제 도입, 육아휴직급여 인상, 우수기업 지원 제도화 등
- ▶ (양육·돌봄) 유보통합·늘봄학교 추진,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
- ▶ (주거·결혼) 난임지원 확대, 주택자금지원 소득기준 완화, 결혼·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 등

- (분야 별 대책) 아동정책, 난임·다둥이, 출산가정 주거지원 등 수요 반영한 분야별 대책 순차 발표('23)

* ▲ 아동정책 추진방안('23.4), ▲ 난임·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('23.7),
▲ 출산가정 주거지원 강화 방안('23.8), ▲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방안('23.8) 등

- (임신·출산 지원) 만혼·난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건강한 임신·출산을 위한 지원 확대

* (출산, 세) '14.32 → '23.33.6(+1.6세), (고령산모, %) '14.21 → '23.36(+14%p)

** (난임진단자, 명) '19.22만 → '21.25만 → '23.24만명(여 15만, 남 9만)

- (임신 건강 지원) 다둥이 임신·출산 의료비 바우처 확대*('24.1), 고위험 임신부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**('24.1),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설***('24.4) 등

* (기준변경) 기존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 원 → 개선태아당 100만 원

** (기준변경) 기존기준중위소득 180% → 개선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

*** (지원내용) 여성 13만원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), 남성 5만원(정액검사)

- (난임 지원)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*('24.1),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급여 횟수 확대**('24.2), 난임시술 횟수 확대(난임부부당 21회→출산당 25회)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(45세 ↑, 50→30%) 등

* (前) 8개 시도 중위소득 180% 이하 지원(9개 시도 소득기준x) → (後) 소득기준 폐지

** (前) 체외수정 16회(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) → (後) 체외수정 20회

- (양육 지원)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('23) 및 확대('24), 첫만남이용권 강화*('24) 등 추진

* 부모급여 0세 70→100만원, 1세 35→50만원,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200→300만원으로 확대

- (저출생 거버넌스 강화)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, 사무국 확대 개편('24.3)

* (조직) 이전1국 5과 → 확대1처 3국 11과 / (정원) 이전23명 → 확대42명

- 인구정책 기획·저출생 예산사전심의 등 기능을 보유한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을 위해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전면 개정 추진

- (평가 강화)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('24.5, 조세재정연구원 위탁) 및 차년도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주기 개선('25.1)

* 지침시달1월 15일 → 결과취합2월 말 → 실적분석~5월 말 → 결과확정·통보5월 말

3 향후 계획

- (저고법 개정)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「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」 전면 개정 국회 논의 적극 지원

- (임신 지원 확대)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·보존비용 지원*,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(부부→25~49세) 등('25.1)

* (지원내용) 냉동난자를 임신에 사용 시 비용 지원(부부당 2회, 최대 100만원)

IV

약자복지 강화

1 정책 개요

- (약자복지 개념)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*부터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
 - * 전통적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 등) + 新 복지 사각지대(돌봄 공백, 사회적 고립 등)
- (추진방향) 정부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 대폭 강화
 - 관련 예산* '23년 14.3%, '24년 13.8%로 대폭 증액,
특히 올해 증가율(13.8%)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(2.8%)의 4배 수준
 - * 복지부 예산 : ('22) 97.5조(+8.8%) → ('23) 109.2조(+12.0%) → ('24) 122.4조 원(+12.1%)
- 예산 중 사회복지지출 : ('22) 80.6조(+6.4%) → ('23) 92.2조(+14.3%) → ('24) 104.9조 원(+13.8%)
 - 다양한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위해 맞춤형 대책 수립·추진
 - * ▲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대책('22.11), ▲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('23.3),
▲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('23.5), ▲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'23.9),
▲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('23.12), ▲ 고립은둔청년 발굴·지원 방안('23.12) 등

2 추진 성과

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

- (저소득층)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, 7년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 저소득층 보호 강화
 - ※ 기준중위소득 인상('23. 5.47% '24. 6.09% '25. 6.42%) + 7년만에 선정기준 상향('24. 기준중위 30→32%)
 - ⇒ 現 정부(3년간) 생계급여 인상액 42만원(4인가구) (('22) 153.6만원 → ('25) 195.1만원)
 - 前 정부(5년간) 생계급여 인상액 20만원(4인가구) (('17) 134.0만원 → ('22) 153.6만원)
 - ※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: 152만 명('22) → 168만 명('24.9월 말 기준)
- (장애인) 최종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:1 돌봄체계 구축('24.6) 등 돌봄을 강화*하고,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** 통해 서비스 선택권 부여
- *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('23.4~),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('24.6~) 등
- ** ('22) 모델개발 → ('23) 모의적용 → ('24) 시범사업(8개 지자체) ~ ('25) 시범사업(17개 지자체) → ('26) 본사업 추진

- (노인)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*, 기초연금 인상** 등 소득보장 강화, 지역사회 의료-요양-돌봄 연계*** 통해 안정적·건강한 노후생활 지원

* 일자리 수 : ('22) 84.5만 → ('24) 103만 명 / 보수 6년만에 7% 인상('24)

** ('22) 30.8만 원 → ('23) 32.3만 원 → ('24) 33.5만 원

***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제정('24.3월),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('23.7월~)

- (아동)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('24.7.)하여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*하고,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**

* 567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,769건의 상담 진행, 보호출산 33명 신청

*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자 확대: ('23) 7.2만 명 → ('24) 20.5만 명

2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

- (新복지수요) 위기청년*, 고독사 위험군('24.7 지원사업 전국확대) 등 새로운 복지수요** 적극 발굴·지원,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

* 자립준비자립수당(월 50만원, '24) 및 자립정착금(1천만원 이상, '23)

가족돌봄자기돌봄비 연 200만원, 고립은둔고립수준 맞춤형 서비스 제공('24.8~)

** 일상돌봄('23.8~) 및 긴급돌봄('24.6~),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('24.7~)

- (발굴체계) 복지위기알림앱 시행('24.6), 위기정보 입수 확대(34→46종, '24.7.), 정확한 주소제공*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 고도화

* 전입신고 시, 다가구주택 동·호수 기재 의무화(행안부, '24.7.~)

-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 없도록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('22.9)해, 개인 맞춤형 복지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

※ (누적 가입자 수(명)) ('21.9월) 895만 → ('22.9월) 952만 → ('23.9월) 1,022만 → ('24.9월) 1,103만

3 향후 계획 :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.0

- 현 정부 임기 내, ▲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(기준중위 35% 목표) ▲기초연금 인상(최대 40만원 목표)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
 - 동절기 대비, 「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」 마련('24.11) 및 지원 추진
- AI 초기상담시스템 도입('24.11)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 고도화
- 新노년·위기청년 등 新수요 대응 확대 및 전국민 돌봄안전망 도입 추진

1 주요 성과

◆ “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”(‘23.2) 이후, 제약·의료기기·R&D 등 분야별 후속대책 충실히 수립·이행 중

□ (R&D 투자) 보건의료 R&D 확대* 및 혁신·도전, 글로벌 R&D 집중투자

* (‘23) 6,967억원(글로벌 248억) → (‘24) 7,884억원(13% ↑, 글로벌 1,360억)

○ (한국형 ARPA-H)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·도전적 연구 착수(285억원, ‘24)

* 사업 규모 : ‘24~‘32년, 1조 1,628억원 (‘23.8 예타 면제 및 ‘24.4 적정성 검토 완료)

** ▲백신 초장기 비축기술 개발, ▲20~30대 10종 암 조기 스크리닝 기술개발, ▲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 개발, ▲근감소증 멀티모달 치료기술개발 등 혁신도전적 연구 프로젝트 10개 기획발표

○ (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) 글로벌 선도기관과 공동연구 협력(복자·과기산연 850억원, ‘24), 공동연구에 하버드,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 다수 참여

* 보스턴코리아 혁신연구지원(‘24.1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), 韓美 혁신성과 창출 (연구중심병원 협력),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, 韓美 암 공동연구(문샷) 등 공동연구 69개 착수

○ (의사과학자) 양성된 의사과학자(MD-Ph.D)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단계별 특화지원 트랙 신설* 및 글로벌 협력 지원 확대**

* (‘23) 신진의사과학자(2년 내외) → (‘24~) 신진(3년), 심화(3년), 리더(5년) (최대11년)

**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(‘24, 신규 10개),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(‘24, 신규 21개)

□ (바이오헬스 산업육성) 범정부 거버넌스 및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마련

○ (거버넌스)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·운영 (총리 주재, ‘23.12~, 4회)

* 혁신위 산하 “규제개혁마당” 신설로 상시 규제 발굴·개선체계 마련, R&D 협업사업 논의

○ (수출확대)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, 의약품·화장품 반기 최고 실적 달성, ‘24년 수출 목표치 250억달러로 상향 조정

* ‘24년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 (올해 목표치인 235억 달러 대비 51.9%)

의약품(44.6억 달러), 화장품(48.1억 달러), 의료기기(29.2억 달러)

○ (의약품) K-바이오 펀드 조성* 및 투자,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촉진**

* 약 3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(1호 유안타 1,500억, 2호 프리미어파트너스 1,566억)

** 다케다('24.2), 노보 노디스크(4월), 암젠·베이진(5월, 바이오코리아) 등 글로벌 제약사 협력 추진

-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존슨앤드존슨 유한양행 렉라자 FDA 승인 획득('24.9.5)

○ (의료기기) 6대 중점분야* 육성 위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** 운영

* 영상·계측진단, 체외진단, 치과, 고령화, 의료용 로봇, 인체삽입형 신소재

**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(6개소, 총 319.6억 원('24~'28))

□ (디지털·첨단의료)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AI 기반 의료 R&D 활성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, 첨단 재생의료 접근성 확대

○ (건강정보 고속도로) 국가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* 정식 가동('23.9~), 상종병원 중심 참여기관 확대 중 (860→1,004개소)

* 공공기관 정보(건강공단 진료·건강검진, 심평원 투약, 질병청 예방접종) 및 연계 의료기관 보유 정보(진단·검사·수술 등 12종)를 "나의건강기록" 앱으로 조회·저장·공유 가능

○ (바이오 빅데이터·의료AI) 100만 명 규모 임상·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중, AI 기반 의료기술 혁신 위한 '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' 발표('24.9.5)

* 시범사업 통해 희귀질환자 등 총 2.5만 명 임상·유전체 데이터 구축·개방('23.6~), 1단계('24~'28)로 77.2만 명 우선 추진 (총 6,065.8억 원, 복지·과기·산업·질병)

○ (첨단재생의료) 환자 접근성 향상 위한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 개정*('24.2),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** 등 추진

* 주요 내용 : ▲임상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를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 허용제도 신설, ▲중대·희귀·난치 질환으로 한정된 연구대상 제한 삭제

** 실시기관 지정 : ('23) 85개 → ('24.10) 103개 / 임상연구 승인 : ('21~'23) 37건 → ('24.10) 48건

2 향후 계획

□ (R&D 투자) 혁신·도전, 글로벌 R&D 투자 지속하고 지역의료 및 신산업 육성 위한 다부처 협업 등 R&D 투자 확대(9,396억 원, +19%)

* ('24) 7,884억원(글로벌 1,360억원) → ('25 정부안) 9,396억원(19%↑, 글로벌 1,976억원)

- 한국형 ARPA-H 혁신도전적 R&D 프로젝트 10개 신규기획·착수('24.6월),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국외 선도기관과의 연구협력 지속 추진
-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시행에 따른 신규 연구중심병원 평가·통보('25.4)
-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, 지역 대학·기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 혁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**지역의료 R&D 신규 투자**
 - * 지역의료연구역량강화사업('25년 정부안 110억원),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('25년 정부안 18억원)
-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**희귀질환, 당뇨, 소아질환 등 질환 중심 연구 신규 추진**
 - *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: ('25. 정부안) 46억원
 - 유전자, RNA 및 후성유전체편집기반 유전자치료제개발: ('25. 정부안) 23억원
 -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지원기술개발 : ('25. 정부안) 57억원
 - 다기관-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: ('25. 정부안) 68억원
- (바이오헬스 산업육성) K-바이오 펀드 추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,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진출 지원*
 - * 글로벌 연구개발, 컨설팅, 투자 유치 등 지원 위한 **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운영**(JLABS KOREA, '24.6~), **보스턴 현지 거점 확대**(CIC 기업 입주 지원, '24년 30개소)
- (디지털·첨단의료)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연계·참여기관 확산*, 바이오 빅데이터 수행기관 선정 등 **참여자 모집 추진**('24.11~)
 - * ('24) 상급종합병원 26개소 연계 → ('25) 전체 상급종합병원(47개소) 참여 계획
- 개정 「첨단재생바이오법」 시행('25.2) 준비 (하위법령 개정, 관리체계 보강 등)